

1.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6자회담 및 북핵문제 전망

전 성 훈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

오바마 정부는 부시의 대북정책이 북한과의 대화에 소홀했고 핵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강력한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고 분명한 선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북핵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서 후보시절 표명한 다음과 같은 입장에 잘 나타나있다.

2008년 6월 26일, 오바마 후보는 북한의 핵신고가 한발 진전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HEU) 및 핵확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해야 하고, 제재는 미국의 핵심 수단이며, 북한이 의무이행을 거부하면 신속하게 제재를 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폐기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0월 11일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서는, 검증 방법에 북한이 동의한 것은 작은 진전이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불능화와 검증을 완료해야 하고, 부시 행정부 8년은 북한과의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입증했으며,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허용하지 않으면 6자회담에서 에너지 제공을 중단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오바마 정부는 부시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 프로세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토대로 북·미 대화를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포기 의사 여부를 확인하려 할 것이다. 북한만 호응해 준다면 평양과 워싱턴에 상주연락사무소가 2009년 중에도 개설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핵폐기를 위한 북·미 대화와 교류가 양국이 친구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상원인준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북한의 합의위반 전력을 중시하는 오바마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강력한 검증장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매 항목마다 검증 가능한지를 따져가며 합의할 것이고, 북한의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챙길 것이다.

6자회담의 향배

6자회담은 시간이 갈수록 북·미 회담에 주도권을 넘겨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2008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4월 북·미 싱가포르 회동에서 북핵신고에 대한 돌파구가 열렸고, 국무부 한국과장이 5월 초 북한을 방문해 영변 핵시설 가동기록 18,800 여 페이지를 확보했다. 7월 12일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검증 관련 사항(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자 면담)에 합의한 것 역시 북·미간 사전 조율된 내용을 추인한 것에 불과했다.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에 반발하여 북한이 취한 불능화 중단과 재처리시설 재가동 통보 등을 해결한 것도 6자회담이 아니라 북·미 대화였다.

결국 6자회담은 북핵회담의 축을 북·미 직접대화으로 옮기려는 북한의 전략에 따라서 서서히 그 의미

를 잃어왔다. 회담을 만든 부시 행정부에서 이미 무기력해진 6자회담이므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강화한다고 해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미 회담에 제동을 걸기는 어려울 것이다. 6자회담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겠지만 북·미 직접대화가 강화되는데 역비례해서 6자회담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2007년 2·13 합의를 기점으로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先 북·미 합의, 後 6자 추인’ 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전제로 김정일과 만날 수도 있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도 크지 않을 것이다.

북핵문제 전망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상당기간 북핵문제는 북·미 대화를 축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년간의 6자회담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대화를 해야 한다는데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의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는 탐색기를 거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진지한 협상국면을 지나 계속협상이나 파국이나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북핵문제는 그야말로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시점은 오바마 행정부 4년 안에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외무성대변인이 1월 13일자 담화에서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와 검증, 핵우산 제거 및 핵군축을 요구한 것은 북·미 직접대화가 성사된다고 해도 북핵폐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로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퇴임을 앞둔 부시 대통령과 체이니 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북한의 HEU 프로그램과 시리아 핵확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야당인 공화당이 북핵문제를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8년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북한정권의 핵보유 의지와 북핵폐기의 어려움을 대내외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에게 사실상 대북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선을 벗어날 경우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